

주제회의
여성

한국 문화예술계의 젠더 불평등 이슈 진단

이산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2016년 5월 17일 서울에서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을 겨냥한 범죄의 쟁점을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무차별적 공격성이 아닌 여성 혐오로 짚는 계기가 되었다. 피의자가 조사 중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이용자를 기다렸다 살해했음을 진술했으나, 경찰은 가해자의 조현병을 범죄 원인으로 지목하고 여성 혐오의 개념을 단편적으로 해석하여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겪어온 삶의 경험과 젠더 폭력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태도였다. 여성들은 이에 맞서 ‘여성이라 죽었다’는 통찰을 소리 높여 외쳤고,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분노의 연대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여성이 겪는 폭력과 차별의 경험이 온라인으로 공유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또 다른 경험이 물밀듯 이어졌다. ‘#○○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운동의 확산, 인지도 높은 예술인과 고위공직자의 위력 성폭력 사건 고발, N번방 사건 보도로 촉발된 온라인 성착취 이슈화는 한국 사회의 젠더 질서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일상화해 왔음을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우에노 지즈코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성 혐오 현상을 규명하며 여성을 ‘남성이 아닌 자’에 대한 낙인으로, 남성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여성 소유와 여성 지배로 규정하는 이성애 중심의 젠더 질서를 비판한 바 있다. 강남역 사건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여성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성폭력과 성차별, 여성 혐오를 고발했다. 예술교육과 창작, 행정, 산업의 장에서 구축되어 온 문화예술계의 젠더 권력 구조를 재발견하고 이에 균열을 내는 예술작품과 캠페인이 잇따라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문화예술계 젠더 권력의 주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작품의 창작 주체를 남성으로, 표현의 대상을 여성으로 젠더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다. 예술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남성 ‘거장’과 여성 ‘뮤즈’가 기록되어 있고, 남성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여성의 예술작품은 지금도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여성은 남성 창작자에 의해 가치를 부여받는 창작의 대상, 수단, 보조자의 위치에 놓이기 쉬우며, 이는 여성의 예술 역량을 폄하하고 활동 기회와 자원 배분의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토대가 된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져 온 게릴라 걸스의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만 하는가?’ 포스터가 재조명되었고, 여성의 ‘젓가슴’을 성적 대상화와 모성 이데올로기를 결합한 비유로 사용하는 남성 문학인의 저작이 비판받았다. ‘한국 인디밴드의 공연에 안 가는 이유들’ 아카이브는 팬과 뮤지션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인디음악계의 여성 팬에 대한 남성 뮤지션의 혐오 발언과 성적 접근, 성폭력 사례를 웹 페이지로 기록했다. 관객들은 연극과 뮤지컬, 영화에서 젠더 폭력을 스펙터클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합리화 또는 미화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둘째, 인맥이 주요 진입 경로가 되는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도 프로젝트별 임시 고용의 각 경제로 불안정성이 높은 예술 생태계의 특성이 발생시키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의 고립이다. 문화예술계의 폐쇄성은 활동 기회를 얻기 전에 이미 기본지식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문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주요 경로가 파벌로 구축된 도제식 교육에 수반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폐쇄성은 파벌의 정점에 있는 경력 예술인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며 형성된 규범과 함께 착취와 폭력의 토대가 된다. 예술의 신비화하고 탈사회화하면서 경력 예술인의 권위를 강조하는 예술공동체는 사회의 만연한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족주의,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강화하기 쉽고,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성차별과 성폭력을 감내하게 된다. 특히 미투운동은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며 참여한 피해자가 다수였고,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예술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공론화 이후 활동 방해와 관계의 고립을 경험하였다. 피해자는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립되기 쉬우면서도, 폐쇄적 공동체로 인해 가해자와의 완전히 분리되지도 못하는 이중고에 처한다. 성차별과 성폭력 피해로 인한 활동 중단이나 이탈을 예술가로서의 ‘자질’ 또는 ‘근성’이라는 개인적 문제로 환원하는 사고방식은 피해자의 고립을 더욱 강화한다.

반면 예술가의 성폭력 가해는 ‘일탈’이나 ‘개방성’, ‘자유’라는 허울로 합리화되곤 한다. 고용 불안정성은 단체나 조직으로 하여금 성폭력 가해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윤리적·제도적 책임을 회피하는 빌미가 되고, 책임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도 제도적 한계로 작용한다. 2023년, 실천문학사는 고은의 신작 시집 출간에 항의하는 여론이 빚발치자 해당 시집의 공급 중단과 계간지 실천문학 휴간을 결정한 뒤, 출간 반대 여론이 조작된 것이며 출판의 자유권이 억압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3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성추행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가해자의 권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성 예술인들은 젠더 권력 비판과 성평등한 실천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회복과 여성 예술인의 경력단절 및 예술계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반성폭력 캠페인과 규약 제정 운동을 확산시켰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개최하고 전문 강사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환경에 맞는 교안을 개발하였으며, 젠더 관점의 창작과 비평에 주목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은 정부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 창구 설치를 비롯한 권리구제 절차 확보를 요구하였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 의한 조직적 예술검열과 이에 따른 지원배제를 일컫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응해 온 문화예술인 권리 옹호 단체, 해시 태그 운동 이후 결성된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단체들의 활동과 결합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요구로 수렴되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수년간의 제정 운동 끝에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계의 젠더 불평등은 빈곤과 불평등을 경제적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취급하는 협소한 인식, 성차를 절대화하여 대립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젠더 격차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 예술 직종과 예술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 예술산업

진흥을 우선시하고 예술산업 종사자의 권리보장에 소홀한 예술지원정책 등 다양한 층위의 문제와 연루되어 있다. 이는 문화예술계의 젠더 불평등이 타 분야 및 사회 공통의 젠더 불평등과 더불어 서로를 구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성 예술인의 불안정성은 취약성이기도 하지만, 예술계 안팎에서 촉발되는 ‘여성’으로서의 호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배경이자, 정상성 규범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역량의 기초이기도 하다.

희망하는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조건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감내를 삭제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예술성과 동시대성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질문하고 실천하는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활동을, 성평등한 사회의 상상을 촉진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계 안팎의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